

광복 70주년! 한반도의 전력통일을 기원하며...



장 세 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지난해 2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연임을 수락하면서 우리 업계에 던진 화두와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은 것이 통일에 대비한 준비와 고민이었다. 그동안 전력품질 향상 및 국가 인프라 구축의 핵심으로 내수기반을 다져왔고, 1990년대 이후에는 수출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전기산업계의 다음 행보는 통일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통일 전후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계획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통일 및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전력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심각한 전력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지난 2000년 12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0만kW의 전력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수급과 전기산업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개 자료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경제협력 단계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새로운 시장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투자지역이자 거점지역으로 큰 장점이 있다. 특히, 내수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관심이 큰 신 시장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한, 전력문제는 북한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핵심자원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연료 확보 문제, 수력자원 한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부지원 없이 북한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다가설 것이다. 이에 따른 단계별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기산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과 공동으로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 개최를 통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북 전력기자재 표준화 연구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전기산업계 통일준비 및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전기산업 통일연구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사무국을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두고 있다.

통일연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전력기자재 표준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통일 정책 방향에 전기산업 분야가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특히 남북 협력사업 추진 시 전기산업계가 선도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모델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통일에 대한 구상과 준비과정이 특정집단이나 미시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산업 통일연구협의회’ 발족은 정부 및 유관기관, 산·학·연과 대·중소기업이 하나 된 통일인식과 결집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향후 전기산업계의 통일기반을 구축해 가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협의회의 기능과 전기산업진흥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작업은 매우 간단명료하게 설정해 놓았다. 북한 전력계통 및 전기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남북한 핵심 전력기기의 표준화(안)을 도출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전기산업 통일에 대비해 가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 북한 전력계통 및 기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 전력망 개보수 방안이나 남한 전력기자재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방향성 등을 제시할 것이다.

전력산업은 모든 산업의 동력원으로 북한경제 악순환의 해결 고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회생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요소이자 통일비용 절감의 선행요소이다.

그 출발점에 전력계통 구성단위인 전력기기의 표준화가 있으며, 전력산업진흥회와 ‘전기산업 통일연구협의회’는 남북 전력기자재 표준화 작업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고 진정한 대비를 해 나가는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